제83호(2021. 6. 3.)
KREI 현안분석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최용호

요 약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은 포전담당책임제, 농장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을 시작으로 변화를 추구

- 가족영농에 가까운 형태로 생산 및 분배 단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생산 동기를 자극하는 한편, 협동농장 경영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장 차원의 증산도 도모함.
- 이러한 농업개혁을 기초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의 농정은 경종, 원예, 축산 등 세부 분야별로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수립된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농물자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외부자본이 필수

- 북한 내부로부터는 자본 조달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상적 대외경제관계 속에서의 해외자본 유치가 요구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2017년 하반기 이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필수 농기자재 수입이 늘고 농업생산기반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생산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하지만 경제제재로 대외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크지 않은 성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음.

2021년 초 경제침체의 국면 반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농업개혁의 지속적 진전과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요

- 2020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전국적인 수해까지 겪으면서 북한 농업은 한층 더 극심한 시련에 처해 있는 상황임.
-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혹독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농정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
- 하지만 제시된 농정 추진을 통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성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뿐 북한 농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이 기대하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통해 변화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대외경제환경 개선을 통한 영농물자 확보 및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요구되며, 우리는 북한 농업의 변화와 농정의 방향을 고려하여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01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의 배경

1.1. 김정일 시대 농업 유산

북한 농업에 큰 변화를 초래한 계기는 1995~1997년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후반은 북한 역사상 최대 경제위기의 시기로 기록됨.

- 1995년과 1996년에 있었던 연속적인 대홍수와 1997년의 가뭄과 태풍은 북한 농업·농촌에 커다란 타격을 줌.
- 농업생산이 급감하고 생산기반도 큰 피해를 입어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으며 대규모 기아가 발생함.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고수해 오던 전통적인 농업생산체제에 수정을 가함.

- 내부 생산요소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회주의 집단영농방식을 유지해 오던 농업생산체제는 기초적인 식량분배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농업생산기반 복구를 위한 개발협력도 받아들이게 됨.
-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증산을 위하여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혁적 조치를 마련함.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실천적 농정을 강조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

시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농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 가지로 구분되는 실천적 농정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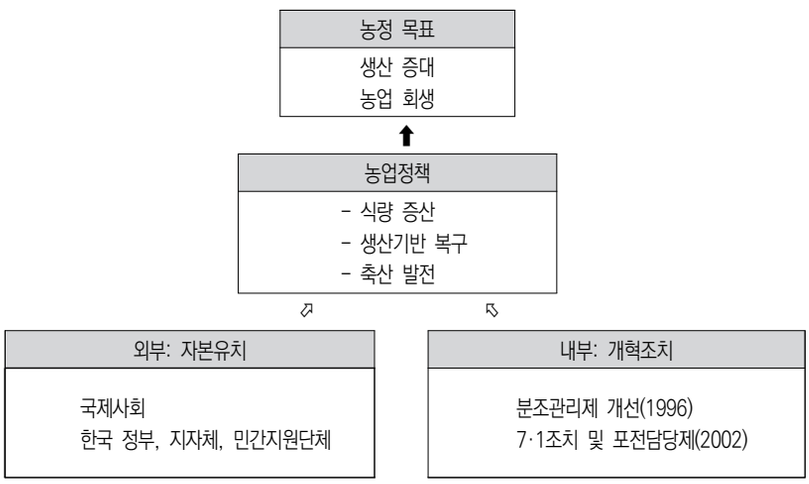
- 농산물 생산 수준을 회복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조속히 복구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등 단기적 식량증산시책, △ 토지정리사업,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등 중장기적 농업생산기반 복구시책, △ 초식가축 사육 장려, 신규 축산기지

건설 등 그 당시 실정에 맞는 축산시책을 시행함.

북한 당국은 두 가지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농정시책을 구현하고자 함.

- 한편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개방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여 농산물 증산을 유도함.

〈그림 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주요 농정 목표와 전략



자료: 김영훈(2012: 25)을 재구성.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대표적인 농업개혁으로 단행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유발하는 데는 한계

1996년 분조관리제 개편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시키고자 함.

-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는 첫째,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던 분조 규모를 15명 내외 규모로 축소, 둘째, 국가생산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 셋째,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로 국가생산목표 대비 초과생산분에 대하여 시장 거래 허용 등임.
- 생산과 분배의 기본 단위인 분조를 축소하고 국가계획 이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증산의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음.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면서 농업부문에는 국정가격 현실화와 협동농장 경영관리의 분권화가 적용됨.

- 농산물의 국정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협동농장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생산량 증대가 분배 몫 제고로 이어지도록 동기 유발을 시도함.

이러한 농업개혁 시도는 내용 면에서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당시 농업생산기반의 취약성과 필수 농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증산이 쉽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
- 이후 국가 차원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각종 편법이 출현하면서 반시장화 정책이라는 결과로 농업개혁은 후퇴하게 됨.

김정일 시대에 나타난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

첫째, 북한에는 필요한 수준에 비해 농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전체 국토 면적의 15~17%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여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농경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둘째, 가뭄, 홍수,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예방대책이나 복구대책이 매우 부실함.

- 자연재해에 대비한 산림 복구, 수리시설 확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북한 자체적 재정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원 규모도 크지 않아 매년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음.

셋째, 각종 농기자재, 장비 및 설비, 연료 및 전력 등 필수 농업투입재 공급이 항상 부족함.

- 북한 내부의 자체적 생산을 통한 농업투입재 공급이 원칙이지만, 자체 생산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수요량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부 지원과 상업적 수입으로 확보하는 물량마저도 부족하여 생산 현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농기계 및 부품도 같은 이유로 공급에 차질이 있어 기계화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도 가축 및 노동력 투입에 의한 농업생산과 농산물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확 후 손실도 큰 상황임.

넷째, 농업생산과 관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제도와 정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 생산된 농산물 분배에 있어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고수하고 있어 생산의욕을 높이기 어려운 체제임.

1.2.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 농업개혁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우리식'이라고 명명하며 경제부문 개혁적 조치와 개방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1년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개혁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2011년 말 경제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시작으로, 2012년 초 TF팀 형태인 상무조를 구성하고 9개월여의 활동 끝에 보고안이 채택됨.
- 이후 시범적·단계적 시행 및 법제화가 연이어 추진되었는데, 2012년 9월 상업부문에 새로운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농업부문에도 실험적으로 적용됨.
- 이러한 실험단계를 거쳐 새로운 경제관리제도를 정식화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며, 주요 내용은 2014년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5·30담화에 의해 공개됨.

2012년 6·28방침과 2014년 5·30담화 등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일환으로 경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을 추진함.

- 5·30담화 이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 위한 각종 관련 법의 제·개정이 추진됨.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그것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영시스템을 개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그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제부문을 이루는 여러 분야들 간에 큰 차이는 없음.

-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도 경제주체인 협동농장에 계획권, 조직권, 재정운영권, 판매권 등을 확대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계획적 요소와 시장적 요소를 혼합하되 과거에 비하여 시장적 요소를 조금 더 허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1)]

1) 이석기 외(2018: 245).

- 농업부문의 계획 부분은 식량을 의미하므로 식량의 국가수매 목표는 의무적으로 달성하되 그 외 초과 물량과 다른 품목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율처분권을 부여하여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경제관리방식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생산물의 분배방식임.

- 새롭게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가족 중심의 영농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농산물 증산의 동기를 강화하고자 함.
- 더불어 과거 현금분배방식에서 새롭게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산물 분배방식도 개선하여 생산자의 경제적 이득도 제고시키고자 함.
- 특히 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분배에 있어서 평균주의를 배제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농업개혁의 조치들은 「농장법」 개정 내용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농장관리책임제와 포전담당책임제 도입이 중심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농업개혁이 실험단계를 거쳐 제도화단계로 이어지면서 협동농장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농장법」이 네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개정)됨.

- 「농장법」은 2009년 12월 제정된 이후,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에 수정·보충(개정)됨.

「농장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장책임관리제'라는 문구가 법령(제4조)에 등장함(2014년 개정).

- 농장책임관리제는 협동농장 경영의 새로운 원칙으로 제시되었는데, 당과 국가에서 부여한 농업생산에 대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협동농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농업부문과 협동농장에도 적용됨을 의미함.

둘째, 기존에 분조관리제와 함께 명시되었던 작업반우대제와 독립채산제의 실시가 삭제되고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할 것을 규정함(2015년 개정, 제22조).

- 포전담당책임제는 이전부터 축소해오던 분조의 규모를 더욱 축소하여 가족 영농에 가까운 3~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이는 농업 생산과 분배의 기본 단위가 집단이 아닌 개인 혹은 농가로 재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한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음.[2)]

셋째, 협동농장 자율경영과 관련한 여러 법령을 정비하여 농장책임관리제에 의해 수립된 원칙을 구체화하여 명시함(2014년과 2015년 개정).

- 농업생산계획의 장성, 실행(제23조), 농업생산조직(제24조), 로력관리(제41조), 자금리용 및 재정총화(제43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및 판매(제50조)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계획권, 조직권, 재정운영권, 판매권 등과 연관됨.
- 이는 국가에 의해 집중되었던 권한이 협동농장으로 대폭 이양되어 협동농장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며 이 내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넷째, 국가의 계획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계획 달성의 실패에 있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는 문구가 법령에 새롭게 포함됨(2015년 개정).

-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의 시달 및 집행(제48조)에는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연재해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농업생산물을 수매계획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함.
- 이는 국가가 의무 부여 시 현실적 여건까지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표 1〉 북한 농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2~2015년 개정 법령
농장의 경영활동 원칙	특별한 언급 없음	농장책임관리제의 실시
농장 운영 관련 제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 실시
계획지표의 분담	언급 없음	중앙지표와 농장지표의 구분, 농장은 중앙지표 달성 전제하에 자체 농장지표 계획 가능
농업생산조직 및 노동력 배치	특별한 언급 없음	여러 부업생산 단위 자체 조직 가능, 직종별 노동력 배치 관련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재정 관련 권한	특별한 언급 없음	농장의 현금 보유 가능, 농장지표를 통해 획득자금의 경영활동 무제한 사용 가능, 주민들의 유휴화폐자금 동원 이용 가능
결산분배	원론적 언급(현금분배방식)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
국가수매와 농장의 자율처분	일정 수량만 남겨두고 전량 국가 수매	국가수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은 농장이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
가격 제정 및 판매 권한	일부 농산물은 직매점을 통해 판매 가능	국가수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은 기관·기업소 등에 판매 가능, 농장지표와 부업생산물은 농장 자체로 가격 결정 및 판매 가능

자료: 양문수(2017: 84).

2) 한겨레(2019. 1. 7.). "[이종석 칼럼] 요즘 북한이 굶지 않는 이유, '다수확 농민'."

1.3. 제7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개최

당대회에서는 당의 전략적 노선과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이 주요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국가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이며, 당대회는 최대 정치문화 행사임.
- 2016년 제7차 당대회는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5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당을 중심으로 국가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규정함.
- 최고지도기관인 당이 노선과 정책의 기조를 제시하면, 내각이 이 기조에 기초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상국가화를 추구함.
-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제시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농업부문에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강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핵능력 제고 등을 견지해 나가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적용을 통한 내부 경제 활성화와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를 꾀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분야별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전력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계·화학·건설·건재공업 등 기초공업부문을 정상화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대를 주문함.

농업부문의 과업 내용은 일차적으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먹거리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김.

- 경종분야에 대하여 △ 주체농법에 따른 과학농사, △ 우량품종 육종 및 수요맞춤형 종자 생산, △ 지대·기후에 맞는 작물 및 품종 배치, △ 선진영농방법 수용, △ 유기농법 장려,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 등을 강조함.
- 축산부문에서는 축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 가축사료문제 해결, △ 사양관리 과학화, △ 수의방역대책 수립과 함께 △ 초식가축 사육 캠페인 추진, △ 공동축산과 개인축산으로 이원화·활성화 등이 제시됨.

- 원예분야에 대해서는 △ 과수분야의 집약화·과학화를 통한 과일 생산 증대, △ 남새온실과 버섯공장의 생산 정상화가 제시됨.
- 농촌경리에 있어서는 영농공정의 기계화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계화 비율을 60~70% 수준으로 높이고 농기계 및 부속품 생산설비 건설 및 정비 등을 제시함.

02

김정은 시대 농정의 성과와 한계

2.1. 농업개혁 조치와 정책 추진의 성과

만만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농업부문 개혁과 정책을 통하여 일정 정도 성과 도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강조된 식량 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증산 효과가 있었음.

-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식량작물 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2001~2009년 대비 2012~2020년 식량 생산량은 약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400만 톤 초반에 머무르던 식량 생산 규모(평균: 약 423만 톤)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는 400만 톤 후반대(평균: 466만 톤)로 상승함.
- 김정은 시대 들어 상승한 식량 생산 수준은 2020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변동 폭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

〈표 2〉 2001~2009년과 2012~2020년 북한 식량 생산량 비교

단위: 만 톤

2001~2009년(A)									2012~2020년(B)									증가율 ((B-A)/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2	'13	'14	'15	'16	'17	'18	'19	'20	
395	413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68	481	480	451	482	470	456	464	440	10.1%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21.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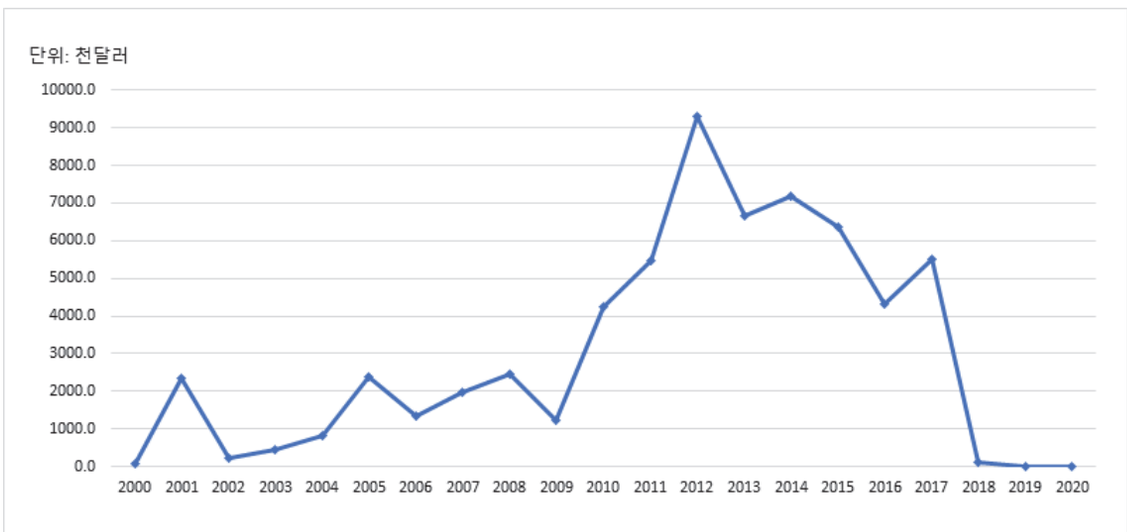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외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좌우되었지만 식생활 측면에서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식품 제조·가공 산업이 활성화됨.

- 각종 관련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3] 북한 주민의 식생활 수준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됨.

3) 북중 무역통계;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각 연도)의 '북한사회변동조사'; 각종 인터뷰 자료; 정은이(2020); 홍제환 외(2018) 등.

- 식품 제조·가공 분야에 국산화가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북제재 강화 이전까지 농식품 관련 기계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그림 2〉, 금컵종합식료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어린이식품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등 전국 각지 가공식품공장의 생산활동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4)]

〈그림 2〉 북한의 식음료 관련 기계류 수입 추이



주: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입에서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HS Code 8438) 수입액을 추출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1. 5. 14.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북한 농업의 성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

첫째, 농업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식량 생산량 증대 등으로 일정 부분 나타남.

- 농장책임관리제 실시에 따라 협동농장이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 생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포전담당책임제 시행과 현물분배 확대에 따라 개인 분배 몫이 실질적으로 확대 보장된 점 또한 식량 증산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대외경제 측면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거둔 성과임.

- 북·중 간 고위급 상호 방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추진, 중국의 동북3성 경제진흥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대 초반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음.
- 북한은 201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법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4) 가공식품공장 활성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찬우(2019), 유영구(2020) 등을 참조.

북·중 간 나선지대 공동개발이 본격화되고 북·중 농업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됨.

- 이러한 북한과 중국 양측의 노력에 힘입어 2013~2015년 기간에만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가 7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5)]
-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농기자재 도입이 늘어난 점도 농산물 증산에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셋째, 시장화 확대도 기여한 바가 큼.

- 국가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이 늘면서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식품 수입의 규모 확대, 먹거리 다양화 및 고급화, 국산 농식품 제조·가공 활성화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식 마트와 상점이 출현하고 전국적으로 시장이 늘고 활기를 띠게 됨.
- 결과적으로 농업의 후방산업으로서 유통산업의 발전 또한 북한 주민의 농식품 수요와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2. 농업개혁 조치와 정책 추진의 한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은 생산성과 해외의존도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도 노정

먼저, 식량 생산에 있어서 생산량 증가가 나타났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향상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쌀의 경우 2012~2013년 평균 3.3톤/ha[6)]이었던 단수가 2019년에는 3.9톤/ha으로 나타나 생산성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았음.
- 2019년 식량 품목별 한국과 북한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쌀은 한국 대비 북한의 생산성이 그나마 76.4%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옥수수와 서류의 경우 40%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집단농업체제를 강조하고 있음.
- 여기서 핵심 쟁점은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비용에 근거한 합리적인 국가의 몫을 가져가는 것에 있음.
-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로부터의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국가계획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매를 하고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5) 자세한 내용은 최용호 외(2017), 최용호(2021)를 참조.
6) 김영훈 외(2015: 13).

〈표 3〉 남북한 농업생산성 비교(2019년)

단위: 천 ha, 천 톤, kg/10a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단수		B/A (%)
	한국	북한	한국	북한	한국(A)	북한(B)	
미 곡	730	571	3,744	2,240	513	392	76.4
옥수수	27	711	101	1,520	514	214	41.6
맥 류	47	85	152	150	296	176	59.5
두 류	72	131	125	140	180	107	59.4
서 류	49	343	252	570	420	167	39.8
합 계	924	1,869	4,375	4,64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9. 12. 16.).

다음으로, 농업개혁 및 농정 추진에 의한 생산 측면의 긍정적 효과는 대외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하에서 북한 농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6년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시점까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음.
- 하지만 그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추진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지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2017년 하반기 무렵을 기점으로 북한 농업은 다시금 침체기로에 들어서게 되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202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경제 및 농업 정책을 정상적 대외경제관계와 해외자본 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로 수립해 놓았던 반면, 2017년 하반기부터 중국과의 수출입 및 투자 유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감하였음.
- 이는 비료, 비닐, 농기계 등 농기자재 확보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며, 생산의욕 제고, 영농자율성 확대 등 농업개혁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와 멀어지게 된 결과로 이어짐.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여 중국과의 수출입이 완전히 막히고 전국적으로 수해까지 입으면서 식량작물 생산량은 김정은 시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7)]

7) 정권 차원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양종합병원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건설사업조차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다.

03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농정 방향

3.1.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개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환경을 감안하여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기조의 새로운 5개년 계획 발표

북한 조선로동당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며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에 대한 국면 전환을 모색함.

- 2019년 초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으로 맞서는 상황이었음.
- 2020년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의 이른바 삼중고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위기 상황에 빠짐.
- 이에 대외경제적 고립과 내부 경기침체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음.

제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의 경제적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주체적 역량 강화를 주문함.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8]라며 이례적으로 지난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함.
- 그러면서 현재 처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함.

현재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위기 극복이 아닌 내부 쇄신과 자립토대 구축 등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함.

-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9]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5년과 현재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음.

8) 노동신문(2021. 1. 6.).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9) 노동신문(2021. 1. 9.). "북한 제8차 당대회 김정은 사업총화보고."

- 따라서 앞으로의 5년에 대해서는 내부 단속 및 결속, 경제사업 체계 및 질서 정비·보강 등 보수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전략 발표로 귀결됨.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 기간 정책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체계와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정비·보강전략에 초점

4개월의 당대회 준비기간 동안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신설·조직하여 과거 사업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경험과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경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추진함.

- 실제 현장에까지 파견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가장 상위의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 것"으로 수립함.

- 경제성장의 지속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은 매우 보편적인 내용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듦.

목표 달성을 위한 현 단계의 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며,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 전략 수립에 있어서 북한 자체 평가의 결론이 그동안 각 산업 내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계가 약화되었고, 산업분야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대외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었다는 것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음.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설정됨.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현시점에 산업별 그리고 산업 간 연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음.
- 금속공업은 주체철 생산체계 강화 → 기계 → 전력, 건설 등 여러 타 산업으로, 화학공업은 한 예로 비료 확대 생산 → 농산물 증산으로 이어져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북한은 제한된 재정 여건하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하여야 경제 전반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수행에 있어서는 내각의 중심적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음.

-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내용상 크게 특별한 점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상황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내부 단속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3.2.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농정 내용 분석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농업부문 목표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과 생산기반 구축

농업부문 중심 목표는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설정함.

- 이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달성하여야 할 국가중대사"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힘.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의 수준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함.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10]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2~3년여간에 해마다 국가의 무수매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역설함.
- 이 국가의무수매계획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며, 제8차 당대회에서 나온 농업부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새로운 것임.[11]

밝혀진 국가의무수매계획의 수준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포전담당책임제를 활용하여 생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됨.

-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19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약 464만 톤으로, 이 규모는 김정은 시대 평균(466만 톤)에 매우 근접해 있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수준의 국가의무수매계획을 2~3년 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포전담당책임제를 기초로 자체적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임.

10) 노동신문(2021. 1. 31.).
11) 양문수(2021). "북한 8차 당대회가 북한 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KREI 북한농업동향』제22권 제4호.

제시된 농업부문 전략적 과업은 종전부터 강조해 왔던 내용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회의적

농업부문 전략적 과업으로는 △ 종자혁명, △ 과학농사, △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 새 땅 찾기와 간석지 개간, △ 농산과 축산, 과수의 발전, △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제시함.

- 종전 5개년 전략과 비교해 봤을 때, 목표와 추진 방안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구체화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
- 이는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과업 달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전체적인 경제사업 추진전략이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라는 점에서 종전 5개년 전략 때 제시된 과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4〉 2016~2020년 5개년 전략과 2021~2025년 5개년 계획의 농업부문 과업 내용 비교

구분		2016~2020년 5개년 전략	2021~2025년 5개년 계획
목표		○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 ○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 정상화	○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 무조건 점령 ○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구축
과업	농업 전반 및 경종작물 재배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열풍 ○ 우량품종 증산 및 지방별, 품종별 수요에 맞는 종자 생산 ○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배치 조정 ○ 농작물 비배관리에서 과학기술적 요구 ○ 선진영농방법 수용 ○ 유기농법 장려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	○ 종자혁명 ○ 과학농사 ○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축산	○ 집짐승종자와 먹이문제를 해결 ○ 과학적 사양관리 ○ 수의방역대책 수립 ○ 풀 먹는 집짐승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추진 ○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으로 이원화	○ 농산과 축산, 과수의 발전
	과수	○ 집약화, 과학화 수준 향상 ○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	
	농촌경리	○ 종합적 기계화를 본격화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율을 60~70% 수준으로 향상 ○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 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	○ 수리화 ○ 기계화
	기타		○ 새 땅 찾기와 간석지 개간

자료: 저자 작성.

농업부문에서 제시된 정책적 문제는 자연재해 대응, 생산기반 구축, 생산의욕 고취, 국가지원 강화 등에 대한 방안으로 구성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강조된 정책적 문제에는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과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를 높이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이 포함됨.

- 여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북한 당국의 재정 여력, 제시된 전략, 대외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강조된 정책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이를 담당하고 책임을 안고 있는 관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04

요약 및 시사점

김정은 시대 농업부문은 경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제도개혁으로 시작하여 야심찬 도약을 준비

북한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라고 평가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도입한 농업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함.

- 포전담당책임제, 농장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이 개혁적 조치는 가족영농에 가까운 형태로 생산 및 분배 단위를 형성하여 생산 동기를 자극하고자 함.
- 협동농장에 계획권, 조직권, 재정운영권, 판매권 등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자율성을 높여 농산물 증산을 유도하고 소득 향상, 구매력 제고, 식생활 개선 및 농산업 활성화를 추구함.
- 이러한 농업개혁의 내용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어 보였으며, 식량 생산 증가, 먹거리 다양화, 식품 제조·가공 활성화 등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함.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를 기초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식량자급 실현과 먹거리 다양화를 위한 적극적인 농정을 추진함.

- 농업부문 정책사업은 경종, 원예, 축산 등 세부 분야별로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증산을 주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농업부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 확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구축·운용과 충분한 물자 공급을 위한 자본 도입이 필요

농업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농업생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생산자의 분배 몫이 확대 보장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임.

- 북한은 그동안 집단농업생산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분조 단위를 축소하여 왔으며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수매물량 축소, 자율처분 허용, 농산물 가격 인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추진동력을 상실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수립한 농정 목표는 정상적인 대외경제관계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가운데 필요한 자본이 유치되어야 실현이 가능함.

- 목표로 수립해 놓은 농업부문의 과학화, 기계화, 기반 구축·정비 등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반면, 북한 내부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핵심적인 요소임.
-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가 적용되면서 농업발전을 위한 여건이 크게 악화됨.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발표된 5개년 계획의 농업부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개혁의 후퇴 없는 지속적 진전과 대외경제환경 개선을 통한 영농물자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필요

현재 처한 북한 농업의 현실은 예년에 비하여 더욱 암울함.

-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경제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그 국면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그 여파로 농업 현장으로의 필수 농기자재 공급이 줄어들고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축소됨.
- 2020년에는 제재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와 수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한 대외경제적 고립은 장기화가 예상되며 농업생산기반은 복구가 지연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5개년 계획에는 혹독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북한 농업의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나,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립해 놓은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5개년 계획에는 식량 생산 목표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는 구호부터 비효율적인 간석지 개간을 통해서라도 농경지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정책 추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주 제한적인 성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북한 농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임.

북한 농업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개혁의 지속적인 진전과 대외경제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지원과 협력 요청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 당국은 농업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의 실제 시행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가 농업 현장에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 대외경제적 환경 개선을 통하여 북한에 부족한 영농물자를 들여오는 것, 즉 상업적 수입, 투자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하여 농기자재 공급을 정상화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북한 농업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추진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농업교류협력 경험에서도 증명된 사실임.
-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북한과의 농업협력에 있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농업협력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서로에게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참고문헌

김영훈. 201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농업과 식량사정.”『수은북한경제』 2012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김영훈·최용호·임채환. 2015.『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양문수. 2021. “북한 8차 당대회가 북한 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KRE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4호.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2018.『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찬우. 2019.『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 창.
유영구. 2020.『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경인문화사.
정은이. 2020.『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 통일연구원.
최용호·김영훈·이윤정·임채환·고갑석. 2017.『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2021.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부문 개혁 및 정책 동향과 과제.”『수은북한경제 2021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홍제환·김석진·정은미. 2018.『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한겨레. 2019. 1. 7. “[이종석 칼럼] 요즘 북한이 굶지 않는 이유, ‘다수확 농민’.”
노동신문. 2021. 1. 6.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노동신문. 2021. 1. 9.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21. 1. 1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0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9. 12. 16. “북한, 올해 식량작물 464만 톤 생산…작년대비 9만 톤 증가.”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1. 4. 20.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각 연도. 북한사회변동조사.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1. 5. 14.

KREI 현안분석

감 수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061-820-2174	taehun@krei.re.kr
내 용 문 의	최용호 연구위원	061-820-2191	yonghochoi@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83호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6.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11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